



역사적인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축하합니다

MB의 반민주·반노동 정책과 연금 개악 저지에 나섭시다

공무원노조들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결정은 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11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임금 동결과 연금 개악, 구조조정 등에 맞서 더 큰 단결을 통한 투쟁을 선택했다. 온갖 음해와 공격 속에서 일궈낸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도 고무적이다. 이는 역사적 진일보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결정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줬다. 정치투쟁 비난과 징계 협박 속에서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공무원에 대한 적대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심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총투표”(통합공무원노조 준비위)에 참가해 정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이번 결정은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단비 같은 소식

이기도 하다. 바로 얼마 전까지 KT를 비롯한 몇몇 노조들의 민주노총 탈퇴와 일부 지도부의 비리, 투쟁건설 회피 등이 계속되면서 노동조합운동은 사기가 꺾여 왔다. 민주노총 가입을 선택한 공무원 노동자들은 ‘더 이상 투쟁과 정치 파업은 먹혀들지 않는다’고 더러운 입을 놀리던 정부와 보수언론에 통쾌한 편지를 날리며 아래로부터 노동자들의 광범한 단결과 투쟁 요구를 보여 줬다.

2004년 노무현 정부의 무지막지한 탄압과 단체행동권 제약 속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논쟁과 갈등 끝에 노조 분리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이후 연금 개악 등 공무원 노동자가 처한 현실은 공동 행동의 필요성을 높였다. 전공노와 민공노, 법원노조는 전교조 등 다른 조직들과 함께 정부의 연금 개악에 맞선 공동행동을 벌였고, 이런 공

동의 투쟁 경험이 함께 단결해 싸워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다. 따라서 통합노조는 이런 광범한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노동자 공격과 반민주·반노동 정책에 맞선 투쟁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연금 개악

최근 이명박 정부는 아래로부터 저항과 압력에 밀려, 또 각종 선거를 앞두고 “친서민”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꾀죄죄한 개혁 시늉으로는 노동자·서민들의 끔찍한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 여전히 ‘생활경제 고통지수’와 가계부채 비율은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건설경기 부양’ 속에서 서민주택은 줄어들고 있다. 막대한 부자 감세와 4대강 예산 등으로 민생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됐고,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노동조

건이 공격받고 있다.

게다가 지금의 일시적 ‘경기 회복’은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이 만들어낸 거품에 의존한 불안정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막대한 재정 지출에 따른 적자를 만회하려고 대폭적인 공공지출 삭감에 나서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연금 개악, 구조조정 등에 그토록 목을 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출근은 앞당기고 퇴근은 뒤로 미루는 ‘얼리버드 운동’,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감축, 기록적인 물가인상에도 동결되는 임금, 임금의 일부인 각종 수당에 대한 공격 등으로 공무원의 77.7퍼센트가 ‘정부 정책 때문에 피로감이 높아’졌고, 74.7퍼센트가 이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뒷면으로 이어짐

» [앞면에서 이어짐](#)

못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2008년 5월 KBS시사기획 〈쌈〉 여론조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생활물가지수는 4.9퍼센트, 4.1퍼센트, 3.1퍼센트, 3.1퍼센트, 5.4퍼센트씩 올랐지만, 공무원 임금은 3.9퍼센트, 1.3퍼센트, 2.0퍼센트, 2.5퍼센트, 2.5퍼센트 인상에 그쳐 실질 임금은 오히려 깎였다. 연금 개악에 대한 불안도 크다. 노동부도 “공무원노조가 증가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핵심 이슈” 때문이라고 분석한다.(2008년 노동조합 조직 현황, 노동부)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지지한 조합원들은 무엇보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지를 바꾸고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 고통전가 공격을 막아내고 싶어 한다.

따라서 통합노조는 당장 지금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연금 개악안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임금 동결도 막아야 한다. 정부는 “내년 4대강 사업 [때문에] … 공무원 임금 동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런 투쟁을 위해서는 정부와 보수언론이 그토록 두려워 거품 물며 떠들어댄 “정치적 행동”도 필요하다. 이미 지난 수년간 공무원 노동자들은 광우병쇠고기 관련 부당업무지시 거부, 대통령 불신임 추진 그리고 가장 최근의 시국선언 시도까지 꾸준히 “정치적 행동”을 해 왔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부패와 반부패 사이에서, 민주와 반민주 사이에서, 재벌·부자와 서민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이런 “정치적 행동”은 더 강화돼야 한다. 통합노조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반서민 정책에 맞선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공격과 탄압에 맞서며 더 많은 공무원 노동자들을 통합노조로 끌어들여야 한다.

통합공무원노조의 출범이라는 역사적 전진이 이런 투쟁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통합공무원노조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적 행동”은 필요하고 정당하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일제히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행동”은 안 된다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행안부, 법무부, 노동부장관들은 지난 23일 공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운운하며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해 정치투쟁에 참여, 불법 활동을 할 경우 단호히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조선일보>는 “공무원노조(가) 불법쟁의 하면 국민도 세금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발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정치연합을 추

진한 한국노총 소속의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는 조용히 입을 다물”(민주노총)며 언제나 부자들의 편에 서서 “정치적 행동”을 펼쳐 온 자들의 이런 발언은 위선적이다.

히스테리

사실 공무원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공무원 연금법 개악, 지방 행정구역 개편 등 어느 것 하나 “정치 행동” 범주 밖에 있는 것이 없다. 저

들의 의도는 통합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 자체를 죄다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세워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자신의 처우를 지키고 개선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게다가 노동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정치 활동의 자유는 헌법에도 보장된 것으로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 활동을 제약하는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진보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 활동의 자유가 전면 보장돼야 한다.

정부와 보수언론이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에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것은 역으로 정치투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작년 촛불시위로 이명박 정부가 결정적 궁지에 몰렸을 때 정부는 노동자들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런 정치투쟁에 노동조합 운동이 적극 뛰어들어야 전체 운동 속에서 지지받으면서 동시에 민주주의 운동에 기여하고, 그 힘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금 개악, 임금 동결, 구조조정을 막아내자

공무원 노동자들이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압도적 지지로 결정한데는 연금개악과 구조조정에 맞서 “단결”해서 “투쟁”하자는 열망이 담겨져 있다.

이명박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해 공무원 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연금 개악과 공직사회 구조조정, 공무원 퇴출제를 밀어 붙이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은 이런 공격에 저항해 왔고, 공무원연금 개악은 매번 공무원 노동자들의 격렬한 반발로 좌초해 왔다. 2000년에는 전국적인 노조(직장협의회)설립 물결과 공청회장 단상 점거 등을 통해 개악을 상당부분 막아낸 바 있다. 2005년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파업까지 벌여 개악 자체를 무산시키기도 했다. 또 2008년 11월에는 5만여 명의 공무원들과 전교조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 집회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은 또다시 공무원연금 개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됐다. 그 내용은 ‘더 내고 덜 받느’ 개악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매년 내는 돈을 현행의 월급(과세소득 기준) 5.5퍼센

트에서 2012년까지 7퍼센트까지 올리고,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은 근속연수와 급여에 따라 최고 25퍼센트까지 삭감하는 내용이다. 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늦추고, 신규 공무원은 유족 연금액을 퇴직연금액의 7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낮추도록 했다. 만약 본회의에서 이 안이 통과된다면 다음 차례는 사학연금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다시 국민연금 개악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

임금도 2년째 동결됐는데(물가를 고려할 때 사실상 임금 삭감) 정부는 올해도 임금 동결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임금 동결·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무원이 ‘평생직장’이라는 것도 옛말이 됐다. 곳곳에서 ‘3퍼센트 강제퇴출’ 시도가 진행되면서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정부조직 2차 개편방안’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만 명에 대한 강제 퇴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공격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와 보수언론은 ‘신의 직장’이니, ‘공무원은 철밥통’이니, ‘공무원 연금은 특혜’

라느니 악의적인 공격도 계속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와 전체 노동자들을 서로 이간질시켜 단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곧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 공무원연금 개악과 임금 동결, 구조조정은 민간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적으로 정당하며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이다.

정부의 공무원 노동자 공격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경기부양책으로 악화된 재정적자를 해소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부자 감세와 부동산·주식 투기조장, 기업주들의 손해 보상 등에 쓰인 비용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아니라 정부와 부유층,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인 기업주들이 져야 한다.

이를 위한 투쟁에 통합공무원노조가 앞장서야 한다. 통합공무원노조가 앞장서서 넓은 연대 투쟁을 건설해서 정부의 공격을 좌절시켜야 한다. 이런 투쟁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도 함께 해야 한다.